

회의자료 94-10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정책협의회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정책협의회 결과**

1994. 7.12.

사회보험연구실

1. 일 시: 1994. 7.11(월) 14:00-17:00

2. 장 소: 국민연금관리공단 회의실

3. 참석자:

- 학 계 - 최성재(서울대), 이재연(숙명여대)
- 연구기관 - 민재성(전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문형표(KDI 연구위원)  
이성원(교통개발연구원)  
변화순(한국여성개발원)
- 보사부 - 송순태 기금관리과장, 한상진 아동복지과 사무관,  
김인택 장애인복지과 사무관
- 연금관리공단 - 한국태(기금운용부장), 정규철(관재부장)
- 보건사회연구원- 정경배(부원장), 고철기, 이가옥, 정기원(연구위원)  
김진수, 박옥희(책임연구원), 권선진, 김성희

4. 토의안건:

-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부문 및 부문별 투자규모
- 투자부문별 구체적 투자방안
  - SOC 확충, 공기업 민영화 참여, 복지투자

##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정책협의회 결과

### <민재성>

- 연금기금 운용은 우선적으로 실질가치(real value)의 유지가 대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본 협의회에 제시된 안에는 2001년까지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기금 고갈시점인 2020년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어야 할 것임.
- 다음에는 각 세부 프로그램별로 이차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경우처럼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즉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지역주민이기 때문임. 이와 관련해 사업선정에 대한 타당성 있는 근거(information)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금기금의 운용은 민감한 사안으로 연금기금이 勞·使의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 즉 가입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함. 기금의 재정안정과 복지투자는 서로 상충적일 수 있는데, 이들의 관계를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음. 결국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기본적 철학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문제의 해결이 용이해질 것임.

### <최성제>

- 일반적으로 복지가 소비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는 사회적 효용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복지도 생활속에서 그리고 그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또한 중산층의 복지욕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노인을 포함한 가족에 있어 더욱 그러함.
- 따라서 기본적 빈곤해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뿐만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욕구 해결에도 관심기울여야 하며, 중산층 이상의 복지욕구 해결은 유료서비스를 통해 가능함.

- 투자의 효과면에서 일본의 경험을 보면 용자나 시설사업의 경우 수익율이 낮게 나타나고,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단에서 재원강화 등의 자금운용사업을 수행함.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는 자금운용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음.
- 본 계획안에서는 주택사업이 제외되어 있는데, 분양보다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임대주택에 기금이 활용되어야 할 것임. 관리운영은 공단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사업 자체만으로는 수익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자체적으로 기금의 손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자적 위상을 갖추어야 할 것임.

<문형표>

- 연금기금은 지급준비를 위한 예탁자금이며 정부의 돈이 아님. 따라서 적립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익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 정부재원과 성격이 다르므로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한 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기금이 투자되는 개별사업에 대해 각각 공공성, 수익성, 복지성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임. SOC나 공기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에 유사한 비중을 두나, 복지사업은 공공성과 복지성을 강조하는 것임.
- 공공부문 투자를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는데, 그에 대한 논거로서 정부의 공공투자 수요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그리고 1998년 이후에도 50% 수준을 공공부문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 기금 수익성 저하문제가 지속됨. 관리운영도 공단이 주체가 되는 방안은 현재 공단의 능력을 감안할 때 어려울 것임.
- 복지부문 투자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할 사업과 연금기금에서 사용할 자금과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복지사업의 경우 장기저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익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면 社内복지시설 설치자금 용자의 경우 시장수요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공무원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륙회관의 경우

수익성면에서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교훈으로 연금에서는 수요를 감안한 경영 효율성 측면에 비중을 두어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연금재정적자가 없으므로 우리와 사정이 다른데, 이는 채권수익률이나 이자율이 우리와 다르므로 수익성의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음.

#### <이재연>

-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보육율은 15% 수준으로, 여성근로자들의 보육욕구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금년부터 기금에서 1,500억원을 보육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신청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야 할 것임.

#### <변화순>

- 발표 자료상으로 복지부문에 투자하면서 수익성 확보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음. 예를 들면 보육사업의 경우 수익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자금회수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과거와 달리 보육시설이 많이 보편화 되었으므로 설치기준상의 “보호자의 근로, 질병...”의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노인 뿐아니라 아동을 위해 급식 또는 오락시설등이 구비된 주간·단기보호시설도 필요함.
- 노인복지센터 등은 장기적인 투자로서 즉각적인 상황이 어려운 사업이므로 획일적인 내용보다는 사업별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는 국가가 담당하고 중산층의 복지는 민간이 담당하는 당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한국태>

- 복지사업의 투자비율이 1단계인 1997년까지 용자:시설 = 80:20인 것은 바람직 한데, 이는 용자사업이 시설사업보다 용이하고 또한 계획만 마련되면 금융기관을 통해 당장 실시가능함. 하지만 98년 이후 50:50으로 시설사업이 30% 포인트

이상 늘어나면 3년안에 시설투자의 준비가 가능할 것인지 매우 회의적임. 예를 들면 공단에 1개 부서가 신설되려면 어려움이 많음.

#### <이성원>

- 우리의 SOC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특히 교통시설(도로, 항만, 철도)은 더욱 그러함. 사회간접자본의 수익성이 낮다는 일반인의 인식이 지배적인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프랑스의 TGV에서 알 수 있듯이 교통관련 수익성이 반드시 낮은 것만은 아님.
- 따라서 교통관련 사업에의 투자시에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예를 들면 부대시설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의 교통관련정책과 연계되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상진>

- 금년 보육사업에 대한 1,500억원 용자는 근로자와 기업대표간의 동의로 이루어진 것임. 용자조건에서 이자율이 9%(수수료 포함)인데, 이는 타 정책금융 이자율인 5-8%보다 높은 편임. 따라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 연금기금의 보육사업 투자로 인해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정부의 재정투자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정부의 기본입장은 저소득층 보육시설은 앞으로도 정부의 책임하에 계속 늘어갈 것임. 또한 금년의 경우 공단의 조직과 인력을 감안하여 보사부가 사업의 주체가 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리공단 또는 별도의 복지사업단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보육사업에는 97년까지 총 7,000억원 정도가 투자될 계획이며, 발표원고의 내용중 아동전용시설의 투자규모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 <김인택>

- 장애인복지분야는 타분야에 비해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고, 개인 사업자가 장애인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실제로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시설은 공단에서 투자하여 설치해주고 운영은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보고서에서 제시된 장애인복지 투자계획이 잘 되어 있지만, 높은 이자율로는 신청자가 거의 없을 것임. 따라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령개정후 재특이 자율로 낮추어야 할 것임.

#### <정규철>

- 공단이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명문화되어야 하며, 시설운영중 병원이나 재활시설 등의 전문시설은 용자를 통해서 민간이 운영하도록 하고 휴양시설이나 연금회관은 공단이 직접 운영할 수 있음. 또한 이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부서가 필요할 것임.

#### <정기원>

- 복지투자비율에서 40:30:20:10을 설정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이 비율로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가를 감안하여 비율을 제시해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김진수>

- 기금운용의 실질가치 보전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가 보다는 제도자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기금의 공공성이나 수익성이나를 볼 때 상호 모순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느 정도 상호 양보할 수 밖에 없음.

#### <박옥희>

- 장애인분야는 수익성이 가장 낮고, 그나마 현재와 같은 이자율을 유지할 경우 용자희망자가 거의 없을 것임. 그리고 장애인 주택자금 용자는 무주택 등록장애인에 한해서 정부예산으로 수행해야 할 것임.

#### <송순태>

- 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복지증진과 재정안정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달성해야 함. 하지만 현 제도상으로는 향후 25년 정도에 이르러 기금고갈을 맞게 되는데, 이



는 기금운용의 방법에 의해 생기는 문제점이 아니라 제도자체의 구조적인 문제  
임. 따라서 연금재정의 불안정 문제는 단지 몇년간의 차이가 있을 뿐임.

- 복지투자의 이차보전 문제를 감안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사업(예를 들면 유료보육시설, 유료양로원, 노인주택  
등)이나 실물투자의 가치가 있는 사업(휴양시설, 전문병원 등)에 투자하는 방  
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유료보육시설의 이자율이 9%인데, 계량화하기 어려운 복지효과를 감안하  
여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기금이 공공부문에 사용되더  
라도 연금가입자의 정서적 측면을 감안하여 이용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